

소방안전연구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20. 09. 01. 제정

2021. 07. 16. 개정

2022. 07. 1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안전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제3항의 소방안전연구 논문의 심사 및 제재를 위한 ‘소방안전연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중복 및 이중게재’는 같은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⑦ ‘기타 부정행위’는 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성)

- ① 소방안전연구 학술지 연구윤리 확립을 이루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 3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의결사항 발생 시기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임무)

- ① 소방안전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제3호에 관련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 ②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조사업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으로 선임된 자 중 1인을 지명해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외부전문기관, 관련 학회,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은 5명 이상의 서명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③ 회의는 5인 이상 출석해야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연구 부정행위 조사)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기피·제척·회피)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시 기피 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 ② 위원은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의 기피·제척·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소집이후에 기피·제척·회피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심의·의결상황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한다.
-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위원회가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이 게시된 웹사이트(홈페이지 등)에서 논문을 삭제하고,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최대 5년까지 공시한다.
- ② 소방안전연구에 5년 이하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 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결과 보고 및 통지)

- 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부 칙(2022. 7. 15.)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소방안전연구’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16.)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소방안전연구’ 발간 절차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소방안전연구’ 발간 절차 개시일(9.1일자)로부터 시행한다.